



보전은 멀고 개발은 가깝다

김민아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국립, 도립, 군립공원 문제를 다루는 '자연공원법'.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 전반을 포괄하는 '산림법시행령'.

이 두 가지 법령의 개정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무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해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10년마다 공원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소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국립공원의 면적을 계속 확대시켜야 할 형편에 왜 축소변경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의 1개 평균면적은 189평방킬로미터로 미국의 9,989평방킬로미터는 물론 일본의 733평방킬로미터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것. 오히려 사유지 매립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국립공원의 경계선을 계속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반발에 부딪히자 '축소변경'이란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조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보전'이란 이상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항은 또 있다. '자연환경지구 내의 일부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물 이축, 개축 등을 허용한다'는 것.

환경단체들은 이같이 개정될 경우 각종 별장, 산장, 레저시설 등이 난립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목변경이 허용되면 임야나 전답이 대지로 둔갑, 각종 건축물이 난립할 것이라며 '북한산국립공원'을 그 보기로 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집단시설지구 내 기존 적법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수선을 허용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이렇다. 현재 국립공원을 '노는 장소'로만 들어 수질오염과 쓰레기홍수를 빚는 근원지가 집단시설지구이므로 모두 공원 밖으로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

환경 단체들은 또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의 이름만 봐도 '개발'이 사명임을 알 수 있는 내무부 지역개발과가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은 귀담아 들을만하다.

자연공원법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돼 5월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개발을 장려하는 입장인 건설교통부 등이 산림청을 지지, 통과된 것이다. 시행령이므로 국회에까지 갈 필요는 없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거치면 시행될 수 있다. 산림청이 목표로 잡고 있는 시행일자는 6월 23일이다.

산림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2분돼 있는 산림을 생산임지, 공익임지, 산업임지로 3분한다는 것.

표면적으로 보면 산림분류체계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지만, 속사

현재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의 1개 평균면적은 189평방킬로미터로 미국의 9,989평방킬로미터는 물론 일본의 733평방킬로미터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것. 오히려 사유지 매립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국립공원의 경계선을 계속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정은 그렇지 않다.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76%가 보전임지이며,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는 24%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이 억제되는 공익임지는 21%에 불과하게 된다. 한마디로 현재 보전되고 있는 산림의 27% 정도만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산림(수령 30-40년 이상의 천연림)의 80% 정도를 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은 대규모 생태계 파괴의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펄쩍 뛰고 있다. 우리 고유의 산림과 생태계는 물이나 대기의 오염과도 달라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스키장 골프장 등 위락시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현재 12%인 목재자급률을 2040년까지 50%로 높이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산림의 공익기능과 생산기능을 비교하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우리나라 산림이 수행하고 있는 수원보호, 토사유출 방지, 보건휴양, 야생조수보호 등 공익기능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27조6천억원. 그러나 임산물 생산액은 연간 8,252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목재 생산액은 487억원 정도이고, 퇴비와 버섯 등의 생산액이 7,76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자연공원법과 산림법시행령 개정안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한동안 주춤하던 지역 개발사업들도 다시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속초시는 5년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돼 온 설악산 모노레일 건설계획을 최근 슬그머니 다시 들고 나왔다.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막고 급증하는 관광객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속초시의 변이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설악산 모노레일 및 위락시설 반대 연대회의'를 결성, 저지투쟁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도 구과발사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은평구 기차촌-북한산길 사이에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6월중 착공될 이 길은 설계대로라면 북한산국립공원의 일부를 지나도록 돼 있어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형편이다.

개발과 보전, 두 과제는 늘 대립되고 상충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영원한가'의 선택은 자명하다. 관계당국의 신중한 선택을 기대할 뿐이다. ■